

폐기물 수입 금지가 일깨워준 중국의 자원순환 정책

[글] 이승무 소장 sngmoo@cycleconomy.org
순환경제연구소

환경정책이자 경제정책으로 태어난 중국의 ‘순환경제’

중국은 1970년대 말 시작된 개혁개방 이래로 경제가 급성장하고, 물질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서방의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취한 환경정책과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서구나 일본의 자원순환 정책을 모델로 삼았는데, 활발한 시민운동과 여론의 관심, 행정 관료들의 추진력 덕분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자원순환 정책은 급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중국은 좀 더 독특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동일한 세계관과 이념을 공유하는 특정한 당의 철학이 그대로 국가의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그 세계관은 마르크스와 마오쩌둥의 유물변증법적인 철학에서 출발하며, 이는 자본주의의 무한성장보다는 물질의 순환을 중시하는 생태경제학이라는 대안경제학적 사고와 더 친근하다.

중국에서는 21세기의 생태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래 정책을 구상한 공학계에서 2003년 ‘순환경제’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이후 2008년 순환경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순환경제는 자원환경 정책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법률은 산업과 경제 전반의 물질 사용의 순환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경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서의 특성을 띠고 있다. 즉 중국의 자원순환 폐

기물 정책의 기본법이자 자원순환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 운영을 규정한 법이다.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출입 관리 정책이 엄격해지면서 한국에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웠던 이 현상으로 인해 중국의 자원순환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중국의 자원순환 정책은 사회주의라는 사상적인 기초에서 출발하여 차근차근 탄탄한 체계를 다져온 것이다. 환경 및 자원순환에 대한 중국의 정책기조를 제대로 파악해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폭넓은 예측과 대응을 마련할 수 있다.

중국 자원순환 정책의 그물망 같은 집행체계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의 자원순환 정책은 우리나라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환경보호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보호부가 전체적인 자원순환 정책에서 주요한 부분을 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중국의 환경보호부는 1청, 15사, 1국, 1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

관공청(办公厅), 기획재무사(规划财务司), 정책법규사(政策法规司), 행정체제 및인사사(行政体制与人事司), 과기표준사(科技标准司), 환경영향평가사(环境影响评价司), 환경감측사(环境监测司), 수환경관리사(水环境管理司), 대기환경관리사(大气环境管理司), 토양환경관리사(土壤环境管理司), 자연생태보호사(自然生态保护司), 핵시설안전감관사(核设施安全监管司), 핵안전감관사(核电安全监管司), 방사능원안전감관사(辐射源安全监管司), 환경감찰국(环境监察局), 국제합작국(国际合作司), 직속기관당위(直属机关党委), 선전교육사(宣传教育司).

이 가운데 토양환경관리사 산하에 토양환경관리처, 화학품환경관리처, 고체폐물관리처가 있고, 폐기물관리정책은 고체폐물관리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폐기물 관리, 전기전자제품 폐기물관리, 위험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자원순환 정책은 국무원의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산하 자원절약및환경보호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의 관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사의 구체적 직무

- (1) 경제, 사회 및 자원, 환경 협조 발전의 중대 전략 문제를 종합분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한다.
- (2) 국무원의 에너지 절약, 배출저감 업무 지도팀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고 에너지 절약, 배출저감 종합 협조를 책임지고 연도별 업무 배치를 정하고 실시를 추진하며, 에너지 절약 배출저감의 전 국민 행동을 전개하는 것을 조직하고 감독 검사 업무를 조직한다.
- (3) 에너지, 자원절약, 종합이용 및 순환경제 발전의 계획과 정책 조치를 조직하고, 책정하고 협조하여 실시하며, 자원절약의 연도 계획을 조직하고 책정한다.
- (4) 에너지 절약, 자원 종합이용 및 순환경제 발전의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제정하고, 에너지절약법, 순환경제촉진법, 청정생산촉진법이 규정하는 우리 위원회가 맡은 유관 직책을 이행한다.
- (5) 환경보호 정책 건의를 연구 제출하고, 위원회 내의 환경보호 업무의 종합 협조를 담당하고 환경보호 계획에 참여하여 편제하고, 환경보호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청정생산의 계획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조직하고 책정하며, 관련 표준을 정하는 것을 지도한다.
- (6)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영역 및 도시 오폐수, 쓰레기 처리의 중앙 재정 성격 자금 안배에 관한 의견, 그리고 에너지, 자원 절약, 종합이용, 순환경제와 유관영역 오염 관리 중점 사항의 국가재정 성격의 지원 투자 안배 건의를 제출한다. 관련 중점 사항과 시범 사업을 심사하고, 신제품, 신기술, 신설비의 보급 응용을 조직한다.
- (7) 절약형 사회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전체 사회의 자원 절약과 지속가능한 소비 관련 업무를 조직, 협조, 지도, 추진한다.
- (8) 에너지 자원절약, 종합이용과 순환경제 선전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조직한다.
- (9) 에너지, 자원 절약, 종합이용, 순환경제와 환경보호의 국제교류와 협적을 전개하는 것을 조직한다.
- (10) 위원회 지도부가 처리하도록 맡기는 기타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처급 기구: 종합처, 종합협조지도처, 에너지절약처, 에너지절약 심사 및 에너지 소비세 총량 규제처, 순환경제발전처, 종합이용처, 환경보호처, 물질약처

자료 <http://hzs.ndrc.gov.cn/newjgsz/>

또한 공업및정보화부 산하의 에너지절약및종합이용사에서는 공업, 통신업의 에너지 절약과 자원 종합이용, 청정생산 촉진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정하고 조직하며, 에너지 절약과 자원 종합이용, 청정생산 촉진 계획 및 오염 통제정책에 참여하여 책정하고, 관련된 중대 시범 사업과 신제품, 신기술, 신설비, 신재료의

보급 응용을 조직하고 이에 협조한다.¹ 이 부서는 종합처, 에너지절약처, 자원종합이용처, 환경보호처가 각각 맡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자원순환 정책은 내각의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중에서 환경보호부는 고체폐기물관리처에서 수출입폐기물관리, 전기전자제품 폐기물관리, 그리고 위험폐기물관리 등 폐기물 관련 규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 결정된 중국의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중국에서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은 2017년 7월에 ‘외국 쓰레기 입경을 금지하고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실시방안’이라는 정책을 공표했다. 그에 앞서 2017년 4월에는 국무원의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와 여러 부처가 순환경제의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안으로 ‘순환발전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2017년 7월의 폐기물 수입금지 정책이 네거티브적인 정책이라면, 4월에 제시한 순환발전 이니셔티브는 순환경제의 목표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방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두 정책은 2012년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의 5년 임기의 중앙위원회 3차~6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명시

1

<http://www.miit.gov.cn/n1146285/n1146352/n3054355/n3057542/n3057543/c4772727/content.html>

표1 순환발전 이니셔티브의 주요 지표 및 달성 목표

분류	지표	단위	2015년	2020년	2015년 대비 2020년 변화 비율(%)
종합	주요자원 산출율	원/톤	5,994	6,893	15
지표	주요폐기물 순환이용율	%	47.6	54.6	7
	에너지원 산출율	원/COE	14,028	16,511	17.7
	수자원 산출율	원/m ³	97.6	126.8	29.9
	건설용지 산출율	만원/헥타르	154.6	200.4	29.6
	농작물 직 종합이용율	%	80.1	85	4.9
전문	일반공업 고체폐기물 종합이용율	%	65	73	8
지표	규모이상 공업기업 중복용수율	%	89	91	2
	주요 재생자원 회수율	%	78	82	4
	도시음식물 폐기물자원화 처리율	%	10	20	10
	도시재생수 이용율	%	-	20	-
	자원순환이용산업 총산출액	억원	1.8만	3만	67

표2 자원순환 관련 정책과제

1. 순환형 산업 체계를 건립	(1) 기업의 순환식 생산 보급
	(2) 공업단지 순환화 발전 추진
	(3) 산업 순환식 조합 추동
2. 도시 순환발전 체계를 개선	(4) 도시 저가 폐기물 자원화 이용 강화
	(5) 생산 시스템과 생활 시스템의 순환 사슬 연결
	(6) 순환경제 시범 도시 건설 추진
3. 자원순환 이용 산업 강화	(7) 산업폐기물 순환이용 추동
	(8) 재생 자원 회수 이용 질의 향상 촉진
	(9) 재제조 산업화, 규범화, 규모화 발전 지지
	(10) 지역 자원순환 이용 체계 구축
4. 제도 공급을 강화	(11)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추진
	(12) 재생산품과 재생 원료 보급 사용 제도 수립
	(13) 1회성 소비품 사용 제한 제도 개선
	(14) 순환경제 평가 제도 심화
	(15) 순환경제 표준과 인증 제도 강화
	(16) 녹색 신용관리 제도 추진
5. 순환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격발	(17) 과학기술 혁신 구동력을 증강
	(18) 공유 경제 발전
	(19) 녹색 소비 확대
	(20) 서비스 메카니즘과 양식 혁신
	(21) 자원순환 산업 "해외진출" 지지
	(22) 산업단지 순환화 개조 행동
6. 중대한 전문 행동을 실시	(23) 농공 복합형 순환경제 시범구 건설 행동
	(24) 자원순환 이용 산업 시범 기지 건설 행동
	(25) 공업 자원 종합 이용 산업 기지 건설 행동
	(26) "인터넷 플러스" 자원순환 행동
	(27)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 순환경제 협동발전 행동
	(28) 재생제품, 재제조제품 보급 행동
	(29) 자원순환 이용 기술 혁신 행동
	(30) 순환경제 전형적 경험 양식 보급 행동
	(31) 순환경제 혁신 시험지역 건설 행동
7. 보장조치 개선	(32) 법규 규제 체계 완비
	(33) 가격 세금 정책 정돈
	(34) 재정금융정책 최적화
	(35) 통계 능력 건설 강화
	(36) 감독관리 강화
8. 조직적 실시 강화	(37) 지방 업무 책임 확정
	(38) 기업 주체 책임 명확화
	(39) 전체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 동원
	(40) 조직 협조 강화

되어 있다. 즉 20세기 말~21세기 초에 시작된 순환경제 구상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2017년에 발표된 두 정책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향후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순환발전 이니셔티브

2017년 4월에 공표된 이 정책에는 13차 5개년계획 시기(2016-2020)에 달성해야 할 지표로 제시된 목표들이 담겨 있다. <표1 참조>

그리고 이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자원순환 관련 정책과제들을 다 제시하고 있다. <표2 참조>

외국 쓰레기의 반입 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제도의 개혁

2017년 7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이 정책은 각 항목의 정책방침에 대하여 환경부, 국가발전개혁위, 세관 등이 확정하고, 완비할 부서들과 정책 마련의 시점을 명

주요 목표별 정책 내용 재분류

(1) 외국 쓰레기 수입을 막는 감독관리제도 완비

- 환경 위해가 크고 군중의 반응이 강렬한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 단계적으로 고체폐기물 수입 종수와 수량을 감축
- 고체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 법률, 법규와 상관 제도 완비
- 정책의 평온한 이행 보장

(2) 외국 쓰레기 불법 반입 통제 강화

- 외국 쓰레기 밀수의 엄격한 단속 지속
- 전과정 감독관리의 노력 강화
- 고체폐기물 집산지의 전면 정비

(3) 외국 쓰레기 반입을 막는 효과적인 메커니즘 수립

- 기업의 주체적 책임 확정
- 국제 합작 메커니즘 건립
- 새로운再生资源 통로 개척

(4) 국내 고체폐기물 회수이용 수준 제고

- 국내 고체폐기물 회수 이용률 제고
- 국내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산업 발전 규범화
- 과학기술 연구개발 노력 강화
- 선전 유도 강화

시해놓고 있다. 이 문서에서 제시하는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체폐기물 수입관리를 엄격히 하고, 환경 위해성이 크고 시민의 반발을 일으키는 고체폐기물 수입을 2017년 말까지 전면 금지한다.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수입을 2019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금지한다. 둘째, 고체폐기물의 수입·운송·이용 등 각 단계의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생태환경 안전을 확보한다. 셋째, 외국 쓰레기의 밀수를 철저히 단속하여 반입되지 못하게 한다. 넷째, 자원의 집약적 이용을 강화하고 국내 고체폐기물 무해화, 자원화 이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국내자원 손실을 점차 충당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고 소강(小康) 사회를 전면 건설하기 위해 적극 지원한다.

이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의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과 국내 폐기물 재활용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다시 네 가지 항목으로 정리된다. 외국 쓰레기 수입을 막는 감독관리 제도의 완비, 외국 쓰레기 불법 반입 통제 강화, 외국 쓰레기 반입을 막는 효과적인 메커니즘 수립, 국내 고체폐기물 회수이용 수준 제고가 그것이다.

그 중 네 번째 항목은 국내 재활용 수준을 적극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1) 국내 고체폐기물 회수 이용율 제고

국내 고체폐기물 회수이용체계 건설을 가속화하고, 건전한 생산자 책임 확대제도를 수립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쓰레기 분류를 추진하고, 국내 고체폐기물의 회수 이용율을 높여서 2020년까지 국내 고체폐기물 회수량을 2015년의 2.46억 톤에서 3.5억 톤으로 높인다. (국가발전개혁위, 공업과 정보화부, 상무부, 주택 도시농촌 건설부가 확정을 책임진다.)

(2) 국내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산업 발전의 규범화

‘도시광산’ 시범기지, 자원재생이용 증대 시범사업, 순환경제 시범단지 등의 이니셔티브와 회수이용 중심 기업의 지도역할을 발휘하며,再生资源 회수이용 기초 시설을 완비하고, 국내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단지화를 촉진하고, 발전을 규모화, 청정화한다. (국가발전개혁위, 공업과 정보화부, 상무부가 장기적으로 확정을 책임진다.)

(3) 과학기술 연구개발 노력 강화

고체폐기물 자원화 이용장비 기술 수준을 높인다. 폐전기전자제품, 폐차 신고된 폐차의 해체이용 수준을 높인다. 기업연합과학연구소, 고등교육기관이 비

² 이승무,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정책”, 순환사회에 게재한 내용을 발췌 수록.

목질계 제지기술 장비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대나무·갈대·사탕수수 찌꺼기·짚 등 비목질계 섬유용용 수준을 높이는 데 진력하고 비목질계 섬유 청정 펄프제조 기술의 확대 노력을 강화한다. (국가 발전개혁위, 공업과 정보화부, 과기부, 상무부가 장기적인 확정을 책임진다.)

(4) 선전 유도 강화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와 외국 쓰레기의 밀수에 대하여 효과적인 선전노력을 강화하고, 위법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를 제때에 공개하고, 우리나라 생태환경 안전과 인민 군중의 신체건강을 보호하는 결단을 표창하고 현양한다. 대중이 쓰레기 분류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유도하고, 녹색소비를 권장하며, 과도 포장을 억제한다. ‘인터넷 플러스’ 주문·설계·생산·판매·물류 모델을 힘써 추진하고, 종이·플라스틱 등의 사용 절약을 권장하며, 전 사회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공동으로 지지하고 적극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한다. (중앙선전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과 정보화부, 환경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상무부, 세관총서, 품질검사총국, 국가네트워크 판공실이 장기적 확정을 책임진다.)

표3 중국의 수입폐기물 관리목록 변화

분류	2008	2009	2015	2017
동식물 상품	9	9	9	11
광사, 광재, 잔사	21	21	23	28
규사파쇄물				2
폐약품	1	1	1	1
화학물질 폐기물	10	10	10	10
플라스틱 파쇄물				8
폐고무, 피혁	4	4	4	6
페텍수종이	1	1	1	2
폐방직원료 및 제품	9	3	3	14
폐유리	1	1	1	1
금속 및 금속화합물 폐기물	6	16	16	16
폐전지		1	1	1
폐전기제품, 설비, 미분리선별 부품, 파쇄물(별도 규정 있는 경우 제외)		9	9	9
기타	7	8	16	16
합계	69	84	94	125

자료 www.mep.gov.cn 에서 정리.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이 상당히 많은 폐기물에 대하여 수입금지 정책을 펼친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국내에 물질 재활용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쓰레기의 재활용을 차단하는 대신 국내에서 재활용되지 않던 폐기물들을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그 밖의 개선안을 보면, 새로운 재생자원 통로를 개척함으로써 “무역과 가공 모델의 변화를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서비스 제공, 관련 기업이 소재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당지의 자원과 환경을 애호하고 중국 기업의 좋은 인상을 유지하도록 지도할 것을 주동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해외 쓰레기 발생원에 중국 기업이 직접 진출하여 수거, 선별, 가공을 한 후에 국내로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2000년부터 수입폐기물 관리목록을 몇 년 단위로 수정하여 공고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관리목록은 2017년 국무원에서 외국 쓰레기의 반입을 제한하는 정책이 발표된 직후에 공고된 것이다. 그에 앞서 공고된 목록은 2015년에 공고된 것으로, 2015년의 목록은 HS코드를 기준으로 11개 분류와 94개 일련번호를 갖춘 데 비해 2017년 목록은 13개 분류와 125개 일련번호를 갖추고 있다. 2년 사이에 31개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³

관리목록은 금지, 제한, 자동허가 재활용가능자원 등 세 가지로 나뉜다. 2008년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분류체계가 아니었고, 환경보호총국(환경보호부 전신) 외에 다른 부서들과 같이 무역금지 품목을 발표했다. 2008년부터 전개해 온 흐름으로 볼 때, 금지 목록이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2009년에 폐전기제품 등의 수입 금지, 2017년에 구사 및 플라스틱 부문의 수입 금지, 폐방직원료 및 제품의 중수가 증가한 것이 그러한 추세를 말해준다. 특히 2017년 조치로 플라스틱 파쇄물을 많이 수출하는 한국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이상과 같은 수입관리목록 이외에 재활용 기술표준에 해당하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통제표준’을 개정하고, (2017년 말까지) ‘수입폐지환경보호 관리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입폐기물관리방법’이라는 행정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통제표준’의 경우 2017년 8월 10일에 초안이 공개되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다. 이 표준은 슬래그, 목제품, 종이, 고철, 비철, 전기전자, 전선, 비철 전기전자, 선박 및 부유물, 플라스틱, 폐차 스크랩에 대해 수입 재생물 원료의 방사능 오염 등 위험물질 함량을 규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폐전기전자는 폐자원 중 협잡물의 함량을 중량기준 2%에서

3 환경부에서는 중국대사관의 공문에 따라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예정에 따른 목록 알람’에서 24종의 금지예정폐기물 목록을 공고하고 있으나, 이전 금지목록에 비해 코드상으로는 31개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0.3%로 엄격하게 하는 등 개정될 내용이 매우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폐지환경보호 관리규정’ 초안도 ISO 9000과 유사한 성격의 체크리스트 형태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과 표준들은 한국의 품목별 ‘순환자원 인정기준’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선진국 못지않게 탄탄한 중국의 자원순환 정책의 강점

중국의 자원순환 정책은 대체로 2000년 무렵부터 ‘순환경제’라는 정책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자원 절약의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산업경제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 중에서 환경보호 당국은 고체폐기물의 규제와 관리라는 분야를 담당했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 담당해왔다.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인 공업과 정보화 부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폐기물의 종합 이용이라는 재활용과 청정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여러 부처에 관련 정책들이 분담되어 있다.

최근 중국이 단행한 폐플라스틱·폐지를 중심으로 한 폐기물 수입 금지 정책은 2012년의 중공 당대회와 2015년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3차 5개년 계획에서 내세운 녹색 생태문명 건설의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며, 이는 ‘순환발전 이니셔티브’라는 순환경제의 종합적인 정책 지침들과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자원 재활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단기적인 무역장벽 차원의 무역 정책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개혁 방향을 담보하기 위해 중국의 각 부처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과 표준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처가 아닌 집권당과 내각 기획부처 차원의 장기적인 포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제시되고 있는 순환경제의 정책 수단들을 보면, 지금까지 서구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개발되어온 개념들에 비해 결코 미흡하거나 초보적이지 않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뿐만 아니라 방대한 정부 기구가 각 항목에 대해 차근차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은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된 후에 폐기물처분부

담금,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이 도입되는 혁신이 이루어졌지만, 장기적인 전망과 철학으로 범정부 차원의 이니셔티브가 창출되고 진행되는 측면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중국의 정책을 살펴보는 일은 우리에게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W**

참고문헌

- 이승무,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정책”, 2017. 12, <순환사회>,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소식지 2호
- 国务院办公厅, 2017. 7. 《禁止洋垃圾入境推进固体废物进口管理制度改革实施方案》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科学技术部 工业和信息化部 财政部 国土资源部 环境保护部 住房和城乡建设部 水利部 农业部 商务部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国家税务总局 国家统计局 国家林业局, 2017. 4. 《循环发展引领行动》
- 贾华强, 2008, 《循环经济学概论》, 中共中央党校出版社